

주요 내용

■ 금융 부실 정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■

부실 정리 현황

- (부실채권 현황) 99년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65.4조원으로 98년 말 60.2조 원에 비해 5.2조원 증가
- (부실 정리 자원 현황) 금융 부실 정리 자원 64조 원 중 31조 원 정도가 남음

문제점

- (추가 재정 부담 우려) 부실 금융기관의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공적 자금 추가 투입 가능성이 높고, 민간 자율적 정리가 부진하여 재정 부담의 증대 우려
- (금융 부실화 우려) 부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중개 기능의 약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음
- (금융기관 매각의 어려움) 매각 논의 과정에서 기밀 보안이나 협상 주체간의 계약 협의 등이 비시장적 방해 요인들의 개입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

개선 과제

- (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) 엄격한 재정 지원 원칙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, 금융 구조조정의 공적 기구가 보다 유기적 체계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
- (민간 주도의 부실 정리 촉진) 개별 금융기관이 추진하는 워크아웃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뮤추얼 펀드의 도입, 신디케이트 론 추진 등 필요

현안 분석

금융 부실 정리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

임진국

부실 정리의 현황

- (부실채권 현황) 99년 3월말 현재 전체 금융권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65.4조원으로 98년말 60.2조 원에 비해 5.2조원 증가
 - 금융기관 총여신은 572조 원으로 작년말에 비해 5조 원이 감소함. 그러나 총여신에 대한 부실채권 비율은 11.4%로 작년말의 10.4%에 비해 증가
 - 금감위에 따르면, 이는 신규 부실의 발생보다는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임
 - 향후 국제적인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(forward- looking criteria)이 적용될 경우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

< 금융권별 부실채권 규모(99년 3월말 현재) >

(단위: 조 원)

구분	일반은행	특수은행	증권	보험	종금	금고	리스	신협	합계
총여신	299.1	143.2	7.7	42.5	22.6	21.0	24.7	10.8	571.6
부실채권	25.9	11.7	2.4	5.3	2.7	8.4	6.1	2.9	65.4

주: 부실채권=은행의 건전성분류기준상 무수익여신(고정+회수의문+추정손실)
 자료: 금융감독위원회

- (부실 정리 재원 현황) 금융 부실 정리 재원 64조 원중 약 33조 원 정도 소진
 - 성업공사의 정리 기금 여력은 부실채권의 채매각을 통한 환수익 6.4조 원을 포함, 총 18.9조 원으로 알려짐
 - 예금보험공사의 정리 기금 여력은 IBRD 차관 7조 원을 도입, 12조 원으로 알려짐

< 금융 부실 정리를 위한 공적 자금 여력 >

	부실 구조조정 실적	남은 재원
성업공사	- 부실채권 매입: 은행(16.8조 원), 종합금융사(1.8조 원), 보험사(1.4조 원), 증권사(600억 원)	18.9조 원
예금보험공사	- 예금대지급: 8.8조 원(종금사 5.8조 원) - 종자 지원: 8.6조 원 - 자본잠식분 보전: 9.1조 원(인수 은행 8조 원)	12조 원

문제점

- (추가적인 재정 부담 우려) 매각 대상 금융기관의 처리가 난항을 겪어 공적 자금 투입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 - 일부 부실 금융기관의 先건전화-後매각 방식이 불가피해질 경우 공적 자금의 추가 투입이 이루어질 예정임
 - 사적 구조조정이 부진하여 공적 구조조정에 의한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우려도 있음(아래 표 참조)

< 금융 부실 정리의 부문별 추진 실적 평가 >

주체별	담당 주체	추진 현황		평가
공적 구조조정	성업공사	부실 자산 매입 및 관리·매각		원활한 진행
	예금보험공사	-부실 금융기관의 건전화 지원 및 감시	-예금 대지급 -증자 지원 -배드뱅크 방식에 의한 건전화 추진	-지원 규모를 둘러싼 民·官 異見 -배드뱅크의 설립 추진 부진
	금감위	-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감독	-국내외 매각 -제2 금융권 부실 정리 지속 추진	매각 협상의 부진
사적 구조조정	해당 금융기관	-자본 충실화 -부실 금융계열사의 처리	-외자유치 및 증자 -워크아웃 및 출자 전환 -배드뱅크 설립	외자유치 以外에 대부분 부진

- (금융 부실화 우려) 금융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과 시장 경쟁을 통한 도태 과정의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중개기능의 약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
 - 공적 자금 지원 집행 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실 자산의 은폐와 불법 처리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, 이에 따른 추가 부실이 우려됨
 - 모든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화(clean bank화)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 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
- (금융기관 매각의 어려움) 매각 논의 과정에서 기밀 보안이나 협상 주체간의 계약 협의 등이 비시장적 방해 요인들의 개입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
 - 통상 매각·인수의 쌍방 주체들은 최종 계약 체결 전까지 관련 정보의 누출에 의해 크게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음

개선 과제

- (멕시코 사례와 시사점) 미국계 자본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지원,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수익 실현 등으로 금융위기가 빠르게 극복된 반면, 내수의 침체에 따른 부실채권의 누증으로 금융 위기가 재연될 조짐이 나타났음
 - (대규모 부실 채권의 위협 상존) 멕시코의 금융기관들은 내수 부문의 부실 여신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이며, 수출 기업들은 자력으로 해외로부터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자국 금융기관을 외면하고 있음
 - (시사점) 금융권 부실 채권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내수·수출 부문의 적절한 경기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며, 다음으로 회생 불능의 부실 채권은 관 주도-민간 주도의 배드뱅크 설립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음

- (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) 재정의 추가 부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, 종전보다 엄격한 재정 지원의 원칙이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금융 구조조정의 공적 기구가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
 - 정부 지원을 얻기 위한 각종 모럴 해저드 행태와 부실 자산의 은폐나 불법 처리 등에 대한 보다 엄중한 감시와 제재 조항이 요구됨
 - 현재의 예금보험공사-성업공사의 2원적 체제가 부실채권 정리의 비용절감과 신속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업무의 연계를 중심으로 체계화 필요

- (민간 주도의 금융 부실 정리 촉진) 개별 금융기관이 부실 자산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워크아웃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뮤추얼 펀드의 도입, 신디케이트 론 추진 등이 바람직
 - 기존 공적 자금 지원 중심에 의한 부실 정리와 함께 민간 주도의 부실 정리가 보다 활발해질 필요가 있음
 - 이를 위해 뮤추얼 펀드의 도입, 신디케이트 론 전환 등이 우량 금융기관 주도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

(jklim@hri.co.kr ☎ 724-4018)